

# [방글라데시] FY25 2분기(24.10-12월) 경제 동향 보고

주방글라데시대사관

## 1. 주요 경제 전망

- (GDP 성장률) 방글라데시 국내총생산(GDP)은 (FY12) 이후 6-7%대의 성장을 지속하다가 (FY23) 5.78%, (FY24) 5.82%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통계청(BBS)에 따르면, FY25 1분기(7-9월) 1.81%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6.04% 대비 70% 대폭 둔화됨.
- 당지 경제 전문가들은 학생 주도의 반정부 시위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, 홍수피해, 노동자 시위 등에 기인하여 경제 생산량이 저하된 것이라고 분석했으며, 동 이유로 주요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(IMF) 4.5% → 3.8%, 세계은행(WB) 5.7% → 4.1%, 아시아개발은행(ADB) 6.6% → 5.1%로 일제히 하향 조정함.

방글라데시 FY2024-25 GDP 성장률 전망

	FY23	FY24	FY25
정부 목표치	7.5%	6.5%	5.2%
IMF	6%	5.7%	3.8%
WB	5.2%	5.6%	4.1%
ADB	5.3%	6.1%	5.1%

- (국가 신용등급)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Moody's, S&P, Fitch는 방글라데시의 경제 상황, 정치적 안정성,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여 일제히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바 △차입 비용 증가, △외국인 투자 감소, △타카화 가치 하락, △자본 유출, △국내 금융시장 불안정(국채 금리 상승 및 증시 불안) 등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3대 신용평가기관의 방글라데시 신용등급 평가

평가기관	Moody's	S&P	Fitch
신용등급	B2	B+	B+
전망	부정적	안정적	부정적
평가일	24.11.18	24.7.30	24.12.15

## 2. 주요 경제지표

- (인플레이션) FY25 인플레이션은 △원자재 가격 상승, △현지화 평가 절하, △신디케이트(가격 담합, 공급 조절, 조직적 범죄) 횡행, △홍수피해 등에 기인하여 10-12월 모두 10%를 상회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\*은 이에 상응하지 않아, 특히 저소득층 가계 지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\* RMG 부문 노동자의 경우 25.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연 9% 적용 예정

FY25 인플레이션 추이

(단위: %)

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전체 인플레이션	11.66	10.49	9.92	10.87	11.38	10.89
식품	12.54	11.36	10.40	12.66	13.80	12.92
비식품	10.08	9.13	9.50	9.34	9.39	9.26

출처: 방글라데시 중앙은행(BB), 통계청(BBS)

- (외환보유고) 방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, 외환보유고는 12.31 기준 213.6억불(약 3개월치 수입대금 충당 가능)로 IMF 47억불 차관 조건인 24.12월까지 순외환보유액(NIR) 153억불 이상 유지를 충족함.
- (경상수지) FY25 7-11월간 경상수지 적자는 2.26억불로 수출과 송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39.4억불 대비 94% 이상 대폭 감소
  - (수출) 수출진흥청(EPB)에 따르면, FY25 7-12월간 수출은 전년동기 12.8% 증가한 245.3억불을 기록했고, 이 중 의류(RMG) 수출이 198.8억불(13.28% 증가)로 전체 수출의 약 81%를 차지함. 특히 12월에만 의류(RMG) 수출 호조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8% 증가한 46.3억불을 기록
  - ※ 방 의류 제조·수출자 협회(BGMEA)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(1.20) 이후 미국이 방글라데시 RMG 수출 최대 경쟁국인 중국 상품에 대해 최대 60%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(15.62%) 대상국인 방글라데시로 주문이 이전하는 등 방글라데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 전망함.
  - (수입) 수입은 FY25 7-11월간 260.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.2% 소폭 하락
  - (송금) 달러 강세와 더불어 정부가 24.6월 ‘크롤링 페그제도’를 도입한 이후 공식-비공식 환율 격차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송금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2024년 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액은 총 약 268.7억불로 전년 219.2억불 대비

22.5% 증가함.

연도별 송금 추이

(단위: 억불)

	2020	2021	2022	2023	2024
송금액	217.4	220.7	212.9	219.2	268.7

출처: 방글라데시 중앙은행(BB)

- FY25 7-12월간 송금액은 13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7.6% 증가했고, 특히 12월 26.4억불이 유입되며 역대 최고 월별 송금액을 갱신했으며, 최대 송금 국가는 미국, UAE, 사우디, 말레이시아, 영국 순

2024년도 월별 송금액 추이

(단위: 억불)
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송금액	21.1	21.6	20.0	20.4	22.5	25.4	19.1	22.2	24.0	24.0	22.0	26.4

출처: 방글라데시 중앙은행(BB)

### 3. 세제 개혁

- (조례 공표) 과도정부는 IMF 47억불 차관 조건인 26년까지 매년 GDP 대비 세수 비율을 0.5% 로 증대하라는 압박에 따라 1.9 조례를 발표하고, 100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△부가가치세(VAT)와 △특별 소비세(Supplementary Duty)\* 세율을 7.5-15%로 100-200% 대폭 인상하여 FY25(24.7-25.6월) 총 세수 목표 393.4억불(4.8조 타카)를 달성기 위한 추가 11억불(1,227억 타카) 징수 목표를 공표함.

\* 방글라데시, 인도,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일반 세금 외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세(Excise Duty), 특별 소비세(Special Consumption Tax)와 유사함.

※ IMF 47억불 차관 중 3번의 분할 차입으로 방글라데시는 현재까지 총 23억불을 수령했으나 세 차례 모두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바 IMF는 4번째 분할 차입(tranche) 6.45억불을 최종 승인하면서 세수 증대 조건을 분할 차입 수령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하는 '양적성과기준(QPC)'으로 변경하고, △법인 소득세 면제 및 고갈 공제(depletion allowances) 축소, △VAT를 법정 세율 15%로 인상, △고소득자를 위한 추가 개인 소득세 등급 도입, △담배 및 일부 제품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를 권고함.

- 방글라데시 국세청(NBR)은 10년간 세수 목표를 미달성했으며, 최근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FY25 IMF가 권고한 세수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간접세(VAT와 SD)를 인상하여 격차를 메우기로 결정

○ (경제 전문가 반응) 방글라데시 경제 백서 위원회를 이끈 Debapriya Bhattacharya 위원장은 1.18 정부가 효과적으로 세수 증대하기 위해서는 직접세 인상에 집중해야 하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무분별하게(inconsiderately) 인상했다고 비판함.

- 아울러 당지 유력 싱크탱크 정책대화센터(CPD)도 1.13 정부의 1) VAT·SD 인상, 2) 방 무역공사(TCB) 저소득층 식량 보조사업 중단 결정을 비판하며 동 조치로 인해 △인플레이션 가속화, △소비자 구매력 잠식, △저소득층 빈곤 심화, △정책 금리 인상(10%)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(15-16%), 가스 공급 위기, 신디케이트 횡행, 노동자 시위로 인한 불안정에 기인한 사업 비용 증가에 따라 생산 감소, 수출 경쟁력 저하, 고용 감소,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· CPD는 현재 세수의 65% 이상 VAT에서 징수되고 있어 탈세자들의 직접 소득세 징수율을 높이고, 조세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△국세청의 간접세 의존도 감소, △사회 내 조세 정의 확립을 통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

○ (재검토 시사) 한편 소비자와 산업·경제·학계에서 대대적인 세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국세청(NBR)은 1.15 공익을 고려하여 △레스토랑, △의약품, △통신 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율(SD)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율 변경·철폐 가능성도 언급함.

※ 조례에 따라 레스토랑 VAT는 기존 5%→15%, 의약품 VAT 2.4%→3%, 인터넷 통신 특별 소비세 (SD) 면제→10% 부과됨.

## 4. 경제 백서 주요 내용

○ 경제 백서 위원회는 8.29 경제 현황 분석 및 과도정부에 개선 방안 제언을 위해 조직되었으며, 약 3개월간 △거시경제, △구조적·사회적 문제, △정책 제언 등을 다룬 총 23개 장으로 구성된 경제 백서를 편찬함.

- (거시경제) 前 Hasina 정권은 6-7%대의 높은 GDP 성장률을 토대로 경제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GDP 대비 세수 비율 및 GDP 대비 민간 투자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작된 수치로 드러났으며, 외환 보유고가 약 3개월치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200억불 초반대로 감소함에 따라 고갈 타개책으로 수입 규제 강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고, 장기적으로 원자재·중간재, 제조용 기계 등 수입 감소는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침.

- **(구조적 문제)** 정경유착으로 인한 은행의 부실 대출(NPL)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, 대규모 인프라 건설 차관 사업 예산 과다 책정(평균 70% 초과)으로 인한 해외 유출·자금세탁, 공공자산 착복 등 부당이득 취득 관행 심화, 세금 면제 및 비효율적 조세 행정 관리로 연간 160억불의 예산 손실이 밝혀짐.
  - **(사회적 문제)** 부패로 인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혜자의 73%가 빈곤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(실제 취약 계층은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), 이주 노동 허가증 발급 과정 부패로 연간 134억불의 송금 손실이 드러나며 사회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  - **(정책 제언)** 위원회는 단기 과제로 1) 외환보유고 안정화(외화 유출 억제 및 수출 경쟁력 강화), 2)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(예산·차관사업 관리 감시 강화); 중장기 과제로 1) 금융 부문 개혁(은행의 투명성 제고), 2) 제도적 개혁(중앙·지방 정부의 책임성 개선,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), 3) 사회안전망 확대(포괄적·효율적 운영 보장)을 제언함.
- 한편, 경제 백서 위원회를 이끈 Debapriya Bhattacharya 위원장은 Yunus 수반에게 12월 초 경제 백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언에 기반하여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. 끝.